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 "외부 경비지원 받는 국회의원 국외출장 금지"

정세균 의장,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적절한 것이 사실"

국회의원이 외부기관의 경비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행위가 원칙적 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 대표 정례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 이 밝혔다.

그는 "국외 출장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이 외부 기관 경비 지원을 받아서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부 적절한 것이 사실이다"고 목소리를 노역다

이어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 개선하려고 한다.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며 "국익 관점에서 허용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관위와 권익위 기준을 참고해서 명확한 허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의장은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는 심시위를 구성해 시전 심사가 이 뤄지도록 하겠다"며 "국외 출장을 다 녀와서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연말 종합적 시후평가를 실시하겠다. 국회 신뢰 회복 차원인 만큼 각 당 원내지 도부가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의장은 본인의 구상에 대해 "TF(특별대책반)를 마련해서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제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국외출장을 갔다가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 특색 있는 지역문화, 청년창업으로 연계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소셜벤처 혁신가 내달 9일까지 모집

특색 있는 지역문화가 청년창업으로 연계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 센터)는 지역문화를 비즈니스모델 로 발굴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계하 는 2018 로컬소셜벤처 청년혁신가 를 오는 5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23 일 밝혔다.

청년혁신가는 지역 고유의 일상문화 에 기술·혁신을 접목해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와 제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센터는 지역생활문화를 비즈니 스모델로 개발할 수 있도록 최대 1천 만원의 자금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여기에 비즈니스모델을 사업화할 수 있는 창업 후속지원도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청년층(만19세~39세) 으로 예비 또는 3년 이내 창업자면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 며 전북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힐 수 있다.

전북센터 박광진 센터장은 "청년혁신가 시업은 '전주한옥마을'처럼 지역의 잠재된 가치와 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 내는 기회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모델이 지역과 상생하고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막했다.

한편, 전북센터는 작년 전국 생활문 화 청년혁신가 최종평가에서 준우승 팀 (군산 레드트러블)을 배출해 내며, 주도적 지역혁신 청년창업에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김진성 기자

#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전 예방활동 추진

### 도, 분리수거 요령 홍보 강화 · 거부시 시군 직접 수거 조치 등

전북도는 최근 일부 지자체 아파트에서 발생한 폐비닐등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가 전북 도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이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활용품 수 거거부 사전예방을 위해 시군 수거체 계를 파악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요 령 홍보강화, 수거거부 시 시군 직접 수거 조치 등 도민 불편사항이 발생 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대책을 마련하 여 시군에 전달했다.

또한 전북 도내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시설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시 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시 군별 시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강 조 당부했다.

전북 도내 재활용품은 시군, 청소대 행업체(위탁)가 수거하고 있으며 일 부 공동주택의 경우 민간 재활용업체 가 수거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수 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거거부와 관련한 폐비닐 등 전북 도내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량 은 전국 대비 4% 미만(폐비닐 1%), 관내 또는 가까운 광주 등 인근도시 소재의 고형연료 및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업체로 운반 처리되고 있다.

전북도 이승복 환경녹지국장은 "재활용품을 수거 처리하는데 있어서 시 군과 함께 협력하고, 도민 대상의 흥 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도민 들 또한 반드시 재활용 분리배출 요 령에 따라 배출해 줄 것을 부탁한다." 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클릭 한번으로 전주 문화정보 '한눈에'

#### 시, 시 홈페이지 등에 '문화달력'설치

전주시민과 전주를 찾은 관광객들 은 앞으로 클릭 한번으로 전주에서 열리는 각종 문화행사와 공연정보 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연간 1100만명이 찾고 있는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품격 에 걸맞게 전주에서 열리는 공 연·행사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 도록 전주시 홈페이지(www.jeo nju.go.kr)와 한바탕전주 앱에 문화달력 기능을 추가하는 등 문화정보 알림 기능을 대폭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문화달력 '공연/행사'는 PC사용자의 경우 전주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오른편에 있는 '공연/행사' 아

이콘을 클릭해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바일 사용자의 경우 한바탕전 주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관광' 를 선택 한 후 '공연/행사'를 클릭 하면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공연과 행사가 열리는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돼 시민 및 관광객들의 문화항유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동취재반

#### 6 · 13 지방선거

#### 전북도교육감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 "학교 신설 대책 마련할 것"

#### 서거석 교육감 예비후보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서거석 예비후보는 23일 "전북혁신도시 등을 비롯한 과밀학급 지역 및 신도시 개발 지역에학교 신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지구 단위 개발이 빈번하게 이 뤄지고 있지만 학교 신설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

서 예비후보는 이날 전북도교육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학급 과밀 해소 및 학교 신설을 둘러싼 혼란과 불편은 어 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면서 "(교육감으로)당선되면 혁신도 시를 포함해 과밀학급 해소나 학교 신설 필요성이 있는 곳 을 전수 조사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예비후보는 학교총량제 폐지가 최우선이지만 정권이 비뀐 후에도 교육부가 학교총량제의 큰 틀을 유지하고 있 는 점을 감안, 학생과 학부모 등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 한 현실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는 "전북은 혁신도시를 비롯한 도시지역과 완주 봉동 등 군 단위에서도 학교 신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며 "교육청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과밀학급에 관한 불편이나 민 원 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기자

# "전주 전체 치안 역량 강화 필요"

#### 엄윤상 전주시장 예비후보

엄윤상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예비후 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 전체의 치안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엄 예비후보는 "전주시민들은 치안 서비스 공급 부족과 소비 과밀화로 인해 지역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가 높지 않은데 최근 전북지역의 경 우 살인과 강도 등 5대 범죄율이 좀 체 떨어지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경찰청이 내놓은 최근 3년간 5대 범죄발생에 따르면 2015년 1만4974건, 2016년 1만3375건, 지난해 1만 2558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엄 예비후보는 지역 안전을 위한 효율적 협력 치안 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제 연계 ▲환경설계에 의한 범죄예방 ▲민·경 협력 치안서비스 체계 구축 등 3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엄 예비후보는 "치안 비용과 범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치안조직의 적정한 재배열과 다양한 협력 치안 제도들을 결합·운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치경찰제와 함께 지자체가 참여하는 환경설계 범죄 예방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